

## 북한 경제의 재구성 - part I\*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박후건(경남대학교)

북한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정량적(quantitative)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나 『경제연구』 등과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 자신들이 시기마다 처해 있는 경제 실상과 이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들을 분석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두 개의 연결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 했던 북한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86년 전면적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 체제를 구축한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연합기업소 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1986년까지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그때까지 형성된 북한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주제어: 근로자,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합리화, 연합기업소 체제

\* 이 연구 결과물은 2013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이다.

## 1. 들어가면서

북한은 아직도 미지(未知)의 세계이다. 북한을 학문의 영역에 두고 연구하는 ‘북한학’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지도 30년이 넘지만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조차 아직 북한은 이해하기 어렵고 보통 상식으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인식의 대상으로서 북한, 특히 경제 부문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경제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quantitative)인 경제 관련 통계 수치와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가 요구되나 북한은 1963년 이후 경제 관련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체제 선전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출판하고 있어 북한의 경제는 미지의 영역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영역이 되어 버렸다. 탈북자의 증가로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경제를 기능해보려는 시도도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가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북한 사회의 특성,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 역시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서적과 자료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북한 원전(原典)은 『경제연구』<sup>1)</sup>이지만 북한에

---

1) 『경제연구』는 1956년 4월 10일에 창간되어 과학원출판사에서 호수도서로 발행되다가 1961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되었다. 1964년부터는 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계간지 형식으로 발행되다가, 『사회과학』이라는 사회과학종합리론지가 1973년 4월부터 나오면서 『사회과학』에 합쳐져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 1985년 12월부터 부문별로 나누어졌고 경제 부문은 『경제연구』로 다시 출간되고 있다. 북한에 따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제사상과 이

서 공식적으로 출간되는 경제를 다룬 전문지는 『경제연구』 이외에도 『김일성종합대학교학보: 철학, 경제』, 그리고 『근로자』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학보: 철학, 경제』는 현실 경제보다는 경제 이론에 치중되어 있어 이것을 통해 북한 경제 현실을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이 노동당이고 근로자의 저자들은 주로 중앙당 간부들과 정무원·내각 고위급 관료들임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이 『경제연구』와 비교해 그 수는 적고 다루는 영역도 매호마다 한정되어 있지만,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때로는 당내에서 토의되고 논의되는 내용 등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완곡하게나마 담고 있어 북한 경제 연구에 관해서는 『경제연구』보다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6년까지의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198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연구』를 통해 전개했다.

매체를 체제 선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북한이기에 『근로자』나 『경제연구』를 통해 북한 경제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자료는 그것이 자의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나 『경제연구』에 기고하고 있는 북한 경제학자들은 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고 만약 쓴다고 해도 전년도 대비 또는 몇 년 전에 비해 얼마나

---

론을 깊이 있게 해석 선전하며 북한 경제학 부문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반영하고 있다고 하며 『경제연구』의 독자는 국내외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 대학교원, 경제관리일군, 사회과학 부문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5), 106쪽〕.

늘어났다는 등 매우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나 『경제연구』에 글을 쓰는 북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관련 통계를 볼 수 없거나 당국이 허용한 선택적인 자료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통계에 의존해 글을 쓰지 않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서 경제학의 대한 정의(定意)가 정량(定量)적인 측면보다는 정성(定性)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1985년도판 북한의 『경제사전 1』은 경제학을 “사람들의 물질경제 생활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서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사회의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물질적부의 생산과 리용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방안들의 작성을 자기의 기능과 과업으로 하는 과학의 총체, 일명 경제과학이라고도 한다”<sup>2)</sup>고 정의한다. 이러한 경제학의 정의아래서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통사(通史)적인 입장에서 경제를 인식하고 매 시기마다 형성된 경제 질서와 현상을 분석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규명하고, 나아가 여기에 따른 경제 정책을 고안,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매 시기마다 형성된 경제 질서와 현상을 분석하고 여기서 일반화 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물질적부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객관(客觀)을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제를 통사적으로 인식한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유물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특정한 시각에서 현실을 본

---

2)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16쪽.

다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시각에서 현실을 보든 현실은 현실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각에 따른 해석을 받아들이기보다 어느 시각에서든 서술된 현실을 그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분석·파악한다면 그것이 정량적인 것이든 정성적인 것이든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제 관련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 시기마다 북한 경제학자들 간에 논의된 경제 관련 문제의 고리와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 북한 경제의 속사정을 가늠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나 『경제연구』에 실려 있는 논문들은 정성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치우쳐 있지만 북한 경제라는 현실을 기초로 하고 분석 여하에 따라 북한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근로자』와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실천적 방안’, 즉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북한 경제의 내용과 구조 변화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엿볼 수 있어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 글은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86년까지 구축·형성된 북한 경제의 내용과 구조를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합기업소 체제 그리고 지방 자급자족체제라는 매우 독특한 북한 경제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2년 7월 1일 북한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제관리개선조치’(이른바 7·1 조치)는 일반적으로 북한 경제구조 변화의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7·1 조치’는 북한에서의 개혁·개방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1987년부터 출간된 『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7·1 조치가 나온 배경과 과정 그리

고 여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논문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3년까지 형성된 북한 경제의 내용과 구조를 북한 문헌들, 특히 『근로자』<sup>3)</sup>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전후 북한은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해 자립적 경제 발전을 추구했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조직·동원할 수 있는 노력으로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경제 정책은 외부의 원조 및 지원 여하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60년대 초 대안의 사업체계를 경제 전면에 도입하고 이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정책을 도입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1973년 말 또는 1974년 초부터 이전과는 상이한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에 대한 모색을 시작했다. 1986년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북한 경제의 또 다른 분기점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북한 이외의 곳에서는 연합기업소가 체제화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중요성도 간과(看過)되어 있어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3절에서는 연합기업소 체제가 도입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

3) 『경제연구』는 북한에서 1956년 발간되었으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987년 1호부터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했다.

## 2. 북한 경제의 형성과 구조(1953~1973)

### 1) 전후 북한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과 자력갱생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 실시된 것은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초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이하 중공업 우선)가 나온 후였다. 북한 지역은 3년이 넘는 전쟁 기간 중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모두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으며 대부분의 농업 그리고 산업 기반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sup>4)</sup> 이러한 배경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소련의 발전모델을 차용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공업화만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완결적인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적인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축적의 원천은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로부터의 경제 원조였다.<sup>5)</sup> 북한은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중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원조에서 충당하는 한편 농촌에서는 급속한 농업 협동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북한으로서는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

4) 37만 헥타르의 논밭과 총 8,700여 동의 공장과 기업소 등이 피해를 입어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은 1949년과 비교할 때 각각 24퍼센트, 36퍼센트 정도가 감소했다 [고승효,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김한민 옮김(서울: 청사, 1988), 111쪽].

5)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 동안 국가 예산 수입에서 대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3.6퍼센트였다[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제2차회의 (1958.2) 예산 보고].

는 개인농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농지를 통합·정리해 생산자본이 투입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였다. 또한 낙후되고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들의 의식(사상)을 사회주의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은 먼저 개인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완전히 철폐하고 농촌에서의 농업 협동화를 통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1958년 완성했다.<sup>6)</sup> 북한에 따르면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에 북한의 공업 성장률은 연평균 41.7퍼센트였으며 이 중 생산수단과 소비재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9.4퍼센트, 28.0퍼센트였다.<sup>7)</sup> 1956년 알곡 생산량은 1955년에 비해 약 23퍼센트가 증가된 280만 톤<sup>8)</sup>이었으며 이것은 1949년 알곡량 279만 톤보다 많은 것으로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는 ‘중공업 우선’ 노선이 성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것이었으나 ‘중공업 우선’ 노선에 절실히 필요한 자본은 소련을 위시로 한 외국으로부터 오는 원조에 의한 것으로서 중공업 우선 노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원조가 절실했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소련의 원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중공업우선’ 정책에 불만이었던 소련은 1956년부터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전후 복구 3개년 기간보다 약 50퍼센트 이상<sup>9)</sup> 줄였다.

---

6) 고뢰정, 『북한경제입문』, 이남현 옮김(서울; 청년사, 1988), 137쪽.

7)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균형문제의 창조적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01쪽.

8) 김일성, “사회주의 혁명의 현 계단에 있어서 당 및 국가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1955.4.4), 『김일성전집 18』, 83쪽.



소련뿐 아니라 그 어디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본을 기대할 수 없었던 북한은 내부 축적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여기서 내부 축적이란 협상 가격 차에 의한 농촌 수탈의 방식보다는 절약과 혁신을 통해 증산을 하는 방식이었다. 김일성은 1956년 12월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밑으로 전달해 증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 예비(內部豫備)’를 동원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내부 예비 동원 방도를 대중과 직접 토의해보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강선제강소에 직접 내려가 노동자들과 토의하고 방도를 찾았다고 한다.

강선제강소는 생산 능력을 고려해 원래 6만 톤의 강재 생산을 계획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이 직접 강선제강소에 내려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계획보다 더 많은 강재가 요구됨을 호소하며 함께 방법을 찾을 것을 강구하자, 노동자들은 9만 톤의 강재를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결국에는 결의한 것보다 3톤이나 더 많은 12만 톤을 생산했다고 한다.<sup>10)</sup> 이것에 고무된 김일성은 경제 건설에서 위로부터의 지도가 대중들의 창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의 적극성이 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얻고, 경제건설사업을 전(全) 인민적 차원에서 중앙당 간부들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생산 노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즉 지도 간부의 지도와 대중의 자각과 창발성이 결합하는 바탕에서 경제사업 방향이 전개되도록 한다. 이것이 북한 경제 건설의 총노선<sup>11)</sup>이라는 천리마운동의 시작이었다.

9)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의 자료집 2』(서울: 국토통일원, 1988), 550~551쪽.

10) 김일성, “시, 군 인민위원회이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58.8.9), 『김일성전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97~198쪽.

1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전집 2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363쪽.

## 2) 천리마운동과 비계획 부문 경제의 활성화: 지방 공업과 협동농장

천리마운동은 중공업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경공업이 중심으로 된 지방 공업의 확대와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리마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8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전인민적 운동으로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족시킬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지방 공업은 북한 전 지역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다.<sup>12)</sup> 지방 공업은 주로 중소 규모의 공장들에 기초해 일반 소비품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기계 설비, 철재, 연료 등 일부 생산수단에 대한 지방적 수요도 지방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 공업의 자립적 발전,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 도(道)에는 지방 공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지방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지방에서 요구되는 일부 생산수단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sup>13)</sup>

북한은 소비재 및 일부 생산수단에 대한 지방적 수요를 지방 자체로 충당하게 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앙은 중공업 건설과 대규모 경공업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외국 원조의 급감으로 인한 축적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이것은 독특한 북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었는데 지방 공업의 육성을 통한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재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경제체제는 국가적

---

12) 1959년 9월 현재 2,000여 개의 지방 공업이 있었으며, 1957년을 100으로 할 때 지방 공업 생산액은 1958년 171, 1959년 340, 1960년 423 그리고 1961년 500으로 성장했다[박용성, “지방 공업의 확고한 토대 축성과 새로운 발전 단계,” 『근로자』, 제15호(1962), 18쪽].

13) 김상학·박영근, “현시기 공업 관리 체계 개편의 객관적 필연성과 그의 인민경제적 의의,” 『근로자』, 제15호(1959), 27~30쪽.

차원에서의 자립적 경제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자기 완결적인 경제체계 추구로 행정적인 분권화<sup>14)</sup>도 아울러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정치적 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도 경제위원회를 행정 상위 단위인 경공업위원회의 생산 기술적 지도를 받게 했으나, 도 당위원회장이 도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여 도 경제위원회를 도 당위원회의 당적 통제 아래 두었다. 이와 같은 도 경제위원회 조직은 천리마운동의 균중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 공업에 대한 지방적 창발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공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도 경제위원회 조직은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는 틀에서 중앙 및 지방 공업에 대한 국가 중앙 기관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지역 당 조직에 당적 지도의 결합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sup>15)</sup>

지방으로의 행정 분권화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방 경제의 상대적 독자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정도, 즉 지방의 소비재와 지방 차원에서 요구되는 일부 생산재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방 경제가 운영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천리마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 경제가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밖에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지방 재정 자립도<sup>16)</sup>에서도 확인되는 것인데,

---

14) 중앙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리 및 기술 간부들과 일부 공업 기업소들이 도 경제위원회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도 경제위원회는 중앙 공업에 대한 통제와 지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종전에 도·시·군 인민위원회들의 관리하에 있던 지방 공업 및 수산업 기업소들과 임업성 산하 기업소들을 이관 받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김상학, “인민 경제 발전에서 도 경제위원회의 역할,” 『근로자』, 제7호(1960), 15~17쪽].

15) 위의 글, 17쪽.

16) 북한에서 지방 경제는 지방적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지방 경제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1957년 31퍼센트에서 1960년에는 92퍼센트로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지방(도 차원)에서 재정 자립이 이룩되었다<sup>17)</sup>고 한다.

또한 지방 공업의 생산 규모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전체 소비재 생산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13퍼센트에서 1962년 51퍼센트로 증가했다<sup>18)</sup>고 한다. 총인구의 절반 이하(약 45퍼센트)가 지방에 거주하는 당시 북한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방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소비재를 지방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총 소비재 중 약 절반 정도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이외의 영역에서 생산·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 경제의 분권화는 도(道)에서 군(郡)으로 더욱 세부화되는데 1962년 8월 지방당 및 경제 일군 연석회의 이후에는 군당위원회가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sup>19)</sup> 이 조치로 지방 경제는 군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데 북한 지도부는 군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지역적 단위 거점으로 설정하고 군을 통해 농촌에서의 기술·문화·사상 혁명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을 결합해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상장 전환시킨다

---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은 주로 지방에서의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방 자생적인 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17)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2) 예산 보고.

18) “1962년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로동신문』, 1963년 1월 17일.

19) 편집국, “당 규약은 당 조직들의 활동 준칙이며 당생활의 기본표준이다,” 『근로자』, 제10호(1961), 36~37쪽.

는 임무와 목표를 군에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은 1962년 8월 이후부터는 소비재 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재 생산과 그에 따른 시설 설비, 철재, 연료 등과 같은 일부 생산재 생산도 도 단위가 아니라 군 단위에서 하겠다는 것에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으로의 경제 그리고 이에 따르는 행정 분권화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원조의 급감으로 인한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북한은 천리마운동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창발성을 강화해 경제적·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려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당적 통제를 강화해 집단주의적 사상의 고리를 놓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방의 창발성을 집단주의적 사상의 틀에서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道)라는 광범위한 행정단위를 지도와 통제가 가능한 집단주의 사상의 틀에 넣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집단주의적 사상 강화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군(郡)은 평균 20여 개의 협동농장과 1만 헥타르 내외의 경지가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는 자연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며 말단 행정단위이다.<sup>20)</sup> 그러므로 군은 당적 통제와 지도 그리고 천리마운동을 기반으로 한 군중 노선의 실현이 도 단위와 비교해 더욱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위가 된다.

둘째, 지방 경제를 군 단위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즉 각각의 군이 군내에서 요구되는 소비재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일부 생산재까지도 자체에서 생산·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생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

20) 고승효,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226쪽.

식량 생산의 원천이 되는 군내의 협동농장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1961년 말부터 1962년에 걸쳐 농업 협동경영에 대한 종래의 행정적 지도 방식을 개정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를 확립했다.

군 단위로까지의 이러한 경제·행정의 분권화는 청산리방법과도 연관되어 있다. 청산리방법이란 1960년 2월 김일성이 청산리 현지 지도를 계기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당 사업체계와 방법으로 아래 사람들을 관료주의적으로 명령과 지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 도와주고 대중과 토의를 바탕으로 걸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며, 구체적인 하부 실정 파악을 바탕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라고 한다.<sup>21)</sup> 즉 청산리방법은 일방적인 명령 하달의 관료주의적 행태를 탈피하고 천리마운동의 대중 노선을 관철시켜 당 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면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의거해 대두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에서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통해 새로운 공장·기업소 관리 체계가 창출되고, 공업 기업의 관리 운영에서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대안체계가 도입되었다. 같은 시기 농촌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확립된 것이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청산리방법을 군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건설을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 군 단위로까지의 경제·행정의 분권화를 추진했던 북한 지도부의 의도였던 것이

---

21) 편집국,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근로자』, 제3호(1963), 10~12쪽.

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 경제를 둘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이 지배적인 영역(중공업과 대규모 경공업)과 중앙집권적 계획 이외의 영역(중소 규모의 경공업이 중심이 된 지방 공업과 협동 소유가 지배적인 농업)으로 나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 규모의 경공업이 중심이 된 지방 공업은 군에서 요구되는 소비재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다. 군에서 요구되는 소비재를 군 자체의 힘으로 충족한다는 것은 군에 존재하는 내비를 찾아내고 동원하는 것과 군에 존재하는 유희자재(자원)를 활용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내비와 유희자재(자원)는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잡혀 있지도 않고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계획 이외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경제가 북한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사회로 가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물질적 목표와 사상적 목표 어느 것도 절대화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과 사상적 목표를 우위에 두고 여기에 물질적 조건과 경제 발전 목표를 결합시키는 것에서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을 완성하겠다<sup>23)</sup>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은 또한 도시와 농촌의 차이 그리고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없애는 것을 과도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다.<sup>24)</sup> 이런 측면

---

22) 이 점은 1980년대 중반 전(前)에 출간된 북한 문헌에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1987년부터 볼 수 있는 『경제연구』에서 지방과 군 경제를 다룬 모든 논문에서는 내비를 찾아내고 유희자재를 활용해 소비재를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3) 김일성,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1960.11.27), 『김일성전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290쪽.

에서 볼 때 농촌(지방)에서 경제적 목표(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목표(사상적 요새)는 도시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중앙집권적 계획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경제 운영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방 경제는 정치적으로 당적 통제를 받았으나, 경제적·행정적으로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운영되었으며 계획이라는 통제적인 틀보다는 대중을 동원해 내비와 유희자재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더욱 자율적인 틀에서 경제가 운영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의 틀 밖에서 운영되는 지방 경제는 북한이 정의하고 설정하고 있는 과도기론에 의거한 것이며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비(非)계획 부문이 공존하는 북한의 혼합적인 경제체제(mixed economic system)는 과도기론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계급 차이를 없애 단일적 전 인민적 소유제에 입각한 무계급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3)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 도입의 배경과 이에 따른 모순

북한 경제의 틀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나온 것들이다. 1964년 그리고 1965년 각각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제가 도입되는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는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경제

---

24)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문제에 대하여”(1967.5.25), 『김일성전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457~459쪽.



위기 돌파를 위해 추진했던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모든 경제 정책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source of growth)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외연적 성장 방식은 수확체감의 법칙(the law of diminishing return)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될 수밖에 없다. 『로동신문』이 1964년 1월 18일 자료 보도한 1963년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8퍼센트<sup>25)</sup>였는데 이것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의 공업 생산액 평균 성장률 36.6퍼센트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진 수치였다. 이렇듯 북한은 1963년부터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한 외연적 성장 방식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1963년부터 본격화된 경제, 국방건설 병진 노선으로 자원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10월 경제에서 자주 노선을 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국방에서 자위 노선, 그리고 1963년 2월 정치에서 자주 노선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경제와 더불어 국방에서도 자주 노선을 천명한 것은 경제, 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북한은 1963년부터 경제뿐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군사 부문에 배분한다는 것<sup>26)</sup>을 의미하며 북한에서

---

25) “1963년 경제 계획 실행에 관한 중앙통계국 보도,” 『로동신문』, 1964년 1월 18일.

26) 북한이 정확히 얼마만큼의 자원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더 배분했는지는 북한의 공식 문헌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은 중공업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력 강화를 위해 중공업 부문에 예전보다 자원 배분을 더 많이 할 것임은 합리적인 가정(assumption)이며 북한의 문헌에서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1월 17일 자 『로동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962년 공업 부문에서 투자비 총액 중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퍼센트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퍼센트가 된다. 하지만 1963년 5월에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의 자원 부족 문제는 또한 천리마운동과 같은 대중동원식의 경제 건설에서 오는 자원 낭비 그리고 공장·기업소들의 본위주의와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국가계획기관의 주관주의적 관료주의로 인한 계획의 파행적 운영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천리마운동 그리고 이것이 집단주의 틀에서 더 정형화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한 증산운동이다.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해 증산에 유리한 새로운 생산방식 또는 숨겨진 내부 예비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늘 성공적일 수 없다. 새로운 생산방식은 R&D에 의한 신규 투자가 그렇듯이 실패라는 위험 부담(risk)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고, 숨겨진 내부 예비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sustainable)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27)</sup>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으로서 대중동원의 과잉으로 인한 생산조직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수준을 개선·제고해 생산의 파동성을 최소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대안의 사업체계는 모든 국가 경제 기관들

---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3기 제2차 회의 예산 보고에서 공업 부문 투자 중 증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3퍼센트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업 부문 총 투자액 중 증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과 1963년 1년 사이 27.3퍼센트나 증가한 것이었다. 예산이 1962년과 1963년 사이 약 8.6퍼센트가 증가한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증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7) 김일성도 1959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천리마운동이 시작된 1957년과 같은 예비가 없으며 증산은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김일성,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59.10.22), 『김일성저작집 2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311~312쪽].

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영도체계<sup>28)</sup>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대안의 사업 체계를 보완 그리고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1964년 그리고 세부화체계는 1965년 각각 공식 도입된다.

계획의 일원화체계가 도입되기 이전 북한의 계획화사업은 부문별 경제관리체계에서 이루어졌다. 즉 공장·기업소에서 관리국과 성을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것은 지배인유일 지도체계가 반영된 것으로서 계획의 현물적 목표 달성에 그 유인 동기(incentive)를 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획화체계에서는 피처(Fitzer)가 지적했듯이 개별 공장·기업소들은 계획 과제를 적게 받고 생산요소는 높게 받으려는 현상이 만연<sup>29)</sup>하게 되는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sup>30)</sup>

북한의 국가계획 기관은 공장·기업소들의 이러한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해 생산요소를 개별 공장·기업소들에게 적게 주는 반면 이들이 달성해야 할 생산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공장·기업소들의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한 국가계획 기관의 관료주의적 대응이었다. 그러므로 계획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계획에서 혼란과 차질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계획을 실패로 이끌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계획화사업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계획화사업은 군중 노선을

---

28) 김종완·김정일,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근로자』, 제17호(1963), 45쪽.

29) Donald Fi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London; Pluto Press, 1986), pp.85~86.

30) 리재영, “사회주의 경제 관리와 계획화 사업,” 『근로자』, 제9호(1966), 11~13쪽.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계획 일군들이 직접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자들과 토의를 통해 현장 실정과 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접 관리하는 지구계획위원회와 시·군 계획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했는데 이들 기관들은 국가적 요구와 이익을 우위에 두고, 성 계획국, 기업소 계획부 등 해당 지역과 부문에서의 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sup>31)</sup>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집체적 지도의 원칙 아래 관리국 산하에 자재 상사를 두게 하여 산하 공장·기업소가 필요한 자재를 다른 관리국의 자재 상사로부터 구매해 산하 기업소에 직접 공급해주게 했다.<sup>32)</sup> 또한 공장·기업소에 자재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재 공급부를 두어 이전의 자재공급체계에서 공장·기업소 내의 직장별로 자재 공급원을 두고 자재 공급을 직장별로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났던 기관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근원부터 방지하려 했다. 자재 공급부는 부지배인이 관리했으며 부지배인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재 공급부의 신설로 자재 공급과 이용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

31) 이들은 계획의 첫 단계인 예비숫자 작성에서 주 역할이 주어지는데 예비숫자란 생산 단위인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자 대중과 함께 생산 단위에서 증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연구·검토해 지구계획위원회(또는 시·군 계획위원회)와 관리국과 성에 제출하는 자료를 일컫는다. 흥미로운 점은 예비숫자가 상반기 중에 신설된 지구계획위원회(또는 시·군 계획위원회)와 관리국과 성, 두 개의 경로를 통해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된다는 점인데 이렇게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예비숫자를 집계하는 이유는 관리국과 성만을 통해 예비숫자가 집계될 경우에 빠져들기 쉬운 관리국과 성의 기관 본위주의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의 객관성을 높이지는 데 있었다.

32) 김일성,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내올 데 대하여”(1961.12.15), 『김일성전집 28』, 235~236쪽.

북한은 1963년 11월 내각 결정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모든 공장·기업소에 적용·정착시키는 것을 제도화했다. 이것으로 북한 계획화체계에도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북한은 1964년 3월 내각 결정으로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공식화한다. 북한은 자원 부족 문제의 심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공식화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대안의 사업체계 틀에서 강화해 계획 수립에 있어 당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공장·기업소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해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안의 사업체계 틀에서 계획 사업의 목적은 생산 단위들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계획의 세부화체계는 1965년 9월 제도화되는데 이것의 목적은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들을 국가계획안에 포괄해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세밀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것, 즉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참여하게 결합시키고 협동생산을 세밀하게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계는 애초부터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논리적인 모순과 실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것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 이기주의를 뛰어넘고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의 모든 부분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경제 부문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북한에 의하면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높은 집단주의(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아직 공산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적 수준이 공산주의에 이르러야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산 활동의 모든 부분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계획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미래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영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정 정도의 완충 지대(buffer zone)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계획의 세부화체계는 이러한 완충 지대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없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적 수준이 공산주의의 수준에 있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생산 활동의 모든 부분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세운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나 계획을 생산 활동의 모든 부분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세운다는 것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다는 의미로 계획에 만약에 올지 모르는 내·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완충 지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세부화되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경제적 충격이 북한 경제의 어느 한 부문에 온다면 모든 부문이 유기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는 충격을 흡수해 회석시키지 못하고 충

계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북한 경제 모든 부문으로 퍼지고 북한 경제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sup>33)</sup> 이렇듯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며 계획을 완충 지대 없이 모든 부분이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 국방건설 병진 노선으로 가중된 자원 부족의 문제 그리고 기존 계획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만연될 수밖에 없던 계획의 파행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계는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적 지도와 통제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 단위인 공장·기업소들에서 만연되던 기관 본위주의적인 보수성을 극복하는 한편, 균중 노선을 통해 국가계획 기관의 주관주의적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계획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개별 생산 단위 차원에서는 생산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생산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자원 부족 문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되었듯이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체계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에 정형화된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획화사업으로까지 적용하면서 북한 경제

---

33) 북한은 자립적 경제 노선에 입각해 각 산업이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를 구축했지만 이러한 경제구조는 외부의 충격(external shock)에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권 경제가 붕괴되어 석유와 역청탄(瀝靑炭) 같은 원료가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오지 않자 먼저 농업에서 식량 생산의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는다.

를 이끌어가면서 심각한 축적과 자원 부족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축적과 자원 부족의 문제는 항시적인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의 적용을 받는 계획화사업은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sup>34)</sup>

이것의 해결책으로 비록 건설 분야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물질적 동인, 즉 독립채산제, 현물 평가제, 도급제 등의 경제적 공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해<sup>35)</sup> 풀어가자는 요지의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 세부화체계에 대해 몇만 종이 되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든 상관없이 철저히 계획의 세부화체계를 관철하라는 강력한 교시<sup>36)</sup>가 내려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더 전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일성이 직접 내린 교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부화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계획화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사업이며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관리 사업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더 어려운 문제에 많이 부딪치게 되는데 정치 사업을 앞세우

34) 이것은 1970년대 초에 와서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김일성은 1971년 6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계획의 세부화를 실현하는 데 나서는 편향계획지표 수가 종전의 수천 중에서 수만 종으로 지나치게 확대된 것, 그리고 기업소별로 소소한 세부 물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직접 맞물리는 방법으로 계획화사업을 함으로써 늘어난 업무량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간구했다고 한다[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95~196쪽].

35) 리민수, “기본 건설에서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자,” 『근로자』, 제3호(1966), 25쪽.

36) 김일성, “인민 경제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1965.9.23), 『김일성전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457~458쪽.



면서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잘 배합하면 해결될 수 있다”<sup>37)</sup>는 등 매우 완곡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7개년 계획을 3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라는 이상적(idealistic)인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었다.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를 철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천리마운동식의 대중동원을 통한 증산운동이 그것이었다. 노동당의 기관지인 『근로자』에는 1968년 제6호부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하자는 논문<sup>38)</sup>을 시작으로 천리마운동식 대중동원 방식으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sup>39)</sup> 이 와중에 1969년 김일성의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발표되는데 논문이라기보다는 당시 더욱 심각해지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 실현 문제 대해 최고 지도자로서 우회적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먼저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고 했다. 북한 경제는 당시 침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위의 발언은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어긋나는 (또는) 합법칙성에 합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

37) 리재영,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계획화 사업,” 『근로자』, 제9호(1966), 16쪽.

38) 전창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자,” 『근로자』, 제6호(1968).

39) 편광성, “경제예비동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8호(1968); 권진상,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근로자』, 제10호(1968); 심재성,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 운동,” 『근로자』, 제4호(1971).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빠른 속도의 증산은 대중 노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자면 천리마운동과 같은 대중동원 운동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 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생산수단이 상품의 형태만을 띠게 되는 조건으로 국영기업소의 경영상 독자성과 생산수단 유통에서의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들었으며 이것은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이라고 했다. 즉 북한의 국영기업은 (과도기적 특성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의 유통은 등가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김일성은 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 법칙의 요구를 반드시 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가치 법칙이란 리민수가 이미 1966년 『근로자』 제3호에서 이야기했던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적용, 즉 현물 평가제와 도급제 등의 물질적 자극, 가격을 사회적 필요 노동에 기초해 정해 가격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고, 일한 만큼 받아기는 사회주의적 분배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농민 시장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 교시했는데 북한에서 공업화가 완성되고 기술이 높은 단계로 발전해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때, 즉 공산주의사회로 완전히 이행했을 때 소비품의 분배는 완전히 공급제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적용과 생산수단의 유통 분야에서도 상업적 형태를 옹계 이용해야 한다<sup>40)</sup>고 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경제 적 공간의 합리적 활용과 더불어 속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천리마운동 과 같은 대중 노선을 통해 다시 생산의 속도를 높이자고 하여 경제 침체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의 이와 같은 교시가 있는 이후 북한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철저한 중앙집권 적인 계획경제에서 다시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동원 방식과 경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중 노선을 통한 증산과 절약을 강조하는 대중동원운동은 ‘3대혁명소조운동,’ ‘70일 전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으로 불리며 전개되었는데 김일성은 이러한 대중운동으로 인해 제1차 6개년계획 을 기한 전에 완수했으며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도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sup>41)</sup>고 만족해했다. 북한에 따르면 속도전에 힘입어 북한 공업은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평균 15.9퍼센트로 성장했 는데 이것은 7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12.8퍼센트보다 3.1퍼센트 높은 것이었다고 한다.<sup>42)</sup>

북한은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당의 총노선인 천리마운동의 요구를 훌륭하게 구현하고 그 불패의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다그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즉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 발전시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전투 형식이라고 정의 하며 속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경제 침체에

---

40) 이것은 소비품의 유통은 이미 상업적 형태에서 (등가성의 원칙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전집 7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251쪽.

42) 리길송,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제2호(1981), 51쪽.

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속도전이 심화될수록 계획의 파행성은 불가피했다. 속도전은 천리마운동과 같이 대중동원, 즉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바탕을 둔 증산운동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은 그것을 동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을 정확히 그리고 치밀히 계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속도전은 결국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이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것으로 자원과 설비 그리고 노동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물질적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원의 낭비, 설비의 과도 사용과 노동의 과도 동원에 의한 생산을 저하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김일성이 1969년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상기시켰듯이 북한은 물질적 동기를 자극하고 상품의 유통을 상업적, 즉 등가성의 원칙에 기초해 분배하는 경제적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에서 사상이 강조되면서 경제적 공간은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동기를 자극하는 내부채산제와 작업반우대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소에 있었으나 독립채산제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며, 기업소들이 원료나 자재를 확보하는 데서 싸면 싸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가져가며 그 값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 현상도 만연했다고 한다.<sup>43)</sup>

이에 김일성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시했는데 기본적으로 1969년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내용이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독립채산제를 올바로 실시

43) 전영설, “사회주의경제운영에서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자,” 『근로자』, 제3호(1973), 52~53쪽.

하는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인데, 결국 독립채산제를 대안의 사업체계의 틀에서 정당화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경제 관리를 정규화하고 경제생활에서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sup>44)</sup>라고 규정한 것이다.

독립채산제를 통해 ‘경제 관리를 정규화한다’는 것은 독립채산제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사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질서를 독립채산제의 바탕 위에서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제부터 경제 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반드시 견지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속도전 때문에 유명상실해지고 있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도 독립채산제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과 당 지도부는 아직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 경영 활동의 모든 부분이 세부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기업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보았는데, 독립채산제 안에서 국가재산 관리와 그 이용이 좀 더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sup>45)</sup>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가 북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상징하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규모와 범위(scale)라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늘 상존한다. 즉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경영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 북한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44) 김태운, “대한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옹계 실시하자,” 『근로자』, 제11호(1973), 44쪽.

45) 김태운, 위의 글, 45쪽.

### 3.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적 도입 배경과 과정

#### 1) 독립채산제를 통한 경제 관리의 정규(합리)화: 연합기업소 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1973~1977)

북한은 1973년 말 또는 1974년 초부터 연합기업소를 창설해 운영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다. 북한에 따르면 연합기업소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 밑에 기업소의 통일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 자원의 분배와 조절을 실시해 모든 생산 활동을 직접 관할하고, 산하기업소들의 생산 활동 결과에 대해 당과 국가 앞에 제도적, 즉 생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지는 기업<sup>46)</sup>이라고 한다. 당시 연합기업소는 2·8 비날론연합기업소와 같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규모 생산 단위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연합기업소의 제한적 실시를 통해 연합기업소가 현실에서 실제로 가동되었을 때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적으로 가동되었을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연합기업소의 우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북한은 연합기업소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계획의 합리화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한편, 속도전도 더욱 가열하게

---

46) 최진성, “연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근로자』, 제12호(1974), 39쪽.

47) 최진성은 “연합기업소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단 위에서는 사람들의 일본새가 달라지고 기업관리운영이 개선되었으며 생산이 부쩍 올라갔으며 지금 2.8 비날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연합기업소 들이 국가생산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장성속도가 날을 따라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최진성, 위의 글, 41쪽).

진행시켰다. 그러나 속도전이 진행될수록 사회주의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무시하고 상품화폐 관계와 관련된 경제적 공간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돌리지 못하며 많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낭비하는 현상<sup>48)</sup>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6개년계획이 끝나고 1977년을 완충의 해로 설정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6개년계획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으나, 1977년을 완충의 해로 설정한 것은 일부 부문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고 개별적으로 빈틈이 있는 부문들을 보강해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전망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자는 사정에 의해서라고 설명하는데, 결국 속도(경제성장 그중에서도 공업생산 성장)는 (속도전으로) 보장되었으나, 균형은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재 성장률이 생산재 성장률보다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많은 자재와 자금, 노력의 낭비’<sup>49)</sup>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경제조직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강화였다.<sup>50)</sup> 대안의 사업체계의 단순한 강화가 아니고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강화였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기본단위가 기업소임을 분명히 하고 해당 기업소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그 시기에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정확히 고

48) 리근환,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11호(1976), 54~55쪽.

49) 김철석, “경제발전이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 요구,” 『근로자』, 제3호(1977), 40~42쪽.

50) 편집국,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제5호(1977); 로태석,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근로자』, 제7호(1978).

려해 계획을 세워야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매개 기업소가 증산 절약투쟁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sup>51)</sup>는 논리였다.

나아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치 법칙을 옳게 적용해야 한다며 가격을 바로 정하고 재정적 통제, 즉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sup>52)</sup>과 노동에 의한 분배법칙, 즉 “오직 일한 사람에게만 생산물을 분배하고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주는 원칙에서 노동의 질과 량을 유일한 척도로 분배하는 법칙”을 강조하기<sup>53)</sup>시작했다. 결국 독립채산제는 기업 관리를 합리화하는, 즉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내는 최적의 방법으로,<sup>54)</sup> 그래서 북한이 항시적으로 안고 있고, 속도전으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자원 부족과 투자를 위한 축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 2) 『근로자』(1979~1986)를 통해 본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정규(합리)화에 대한 논의와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적 도입

한중순의 논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독립채산제가 기업 관리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경제적 공간이 되는 이유로 “독립채산제가 로력과 기

---

51) 김경련,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경제관리 개선의 중요담보,” 『근로자』, 제8호(1978), 51쪽.

52) 김재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근로자』, 제3호(1979), 52쪽.

53) 리상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의 올바른 리용,” 『근로자』, 제9호(1979); 김재서,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的重要한 요구,” 『근로자』, 제12호(1979).

54) 한중순, “독립채산제와 기업관리의 합리화,” 『근로자』, 제5호(1979), 37쪽.



계 설비,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의 낭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도록 일군들과 생산자들을 자극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내장 (built-in system)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즉 독립채산제가 가치 법칙의 (형태적) 리용을 전제로 하며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는 기업 관리 방법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리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이다.<sup>55)</sup>

중앙당 간부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고 그것이 중앙당 기관지에 실렸다는 의미는) 당내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공간의 활용의 필연성이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당내에서 경제적 공간의 활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속도전의 여파와 관성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생산은 파동을 겪고 있었다. 여전히 기업소들에서 상순과 중순에는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다가 월말에 가서 돌격 식으로 생산해 월 계획을 수행한다며 설비를 혹사하고 많은 생산 자원을 낭비하며 제품의 질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sup>56)</sup>

생산의 파동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 그중에서도 세부화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나,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다. 박남기는 균형성을 무시하고 경제발전 속도만을 절대시한다면 인민경제 부문들과 재생산고리들의 균형이 파괴되고 경제 발전에서 심한 혼란과 동요를 일으켜 실제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 수 없다고 속도전에 대한 문제를 지

---

55) 한중순, 위의 글, 38쪽.

56) 김원석,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계획화사업,” 『근로자』, 제1호(1980), 42쪽.

적하는 한편, 반대로 계획화사업에서 균형만을 절대화하면서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위한 적극적인 균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 간의 생산적·소비적 연계가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계획성과 균형성을 정확히 보장할 데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데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계획화사업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세부까지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야만 해결된다<sup>57)</sup>고 강조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를 옹호·고수하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1970년대까지의 경제 사업을 총화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과업을 제시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가 바로 그 과업을 담고 있는데 김일성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한 해에 1,0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 1억 2,000만 톤의 석탄, 1,500만 톤의 강철, 150만 톤의 유색금속, 2,000만 톤의 시멘트, 700만 톤의 화학비료, 15억 메타의 천, 500만 톤의 수산물, 1,50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며 10년 동안 3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 것을 ‘10대 전망목표’로 제시했다.<sup>58)</sup> 공업생산 총액 기준으로 이것은 1980년에 비해 3.1배가 높은 것이었으며 알곡 생산 기준으로 1979년 900만 톤에 비해 약 1.7배가 늘어난 목표였다. 김일성 자신도 말했듯이 ‘10대 전망목표’는 만약

---

57) 박남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당의 주체적인 계획화 방침,” 『근로자』, 제9호(1980), 45쪽.

5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1980.10.10),” 『근로자』, 제11호(1980), 31쪽.

이것이 달성된다면 북한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는 대단히 웅대한 것이었다.

김일성이 제시한 ‘10대 전망목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웅대한 것을 떠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이 제시한 해법이다. 김일성은 “경제지도와 기업 관리를 개선하며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며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일성은 이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했다.<sup>59)</sup>

김일성의 위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우회적으로 기존의 경제관리체계(또는 경제 정책)가 낭비를 조장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더욱 철저히 관철되는 방향에서 이것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는 기존의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운영체제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고 대안의 사업체계가 관철될 수 있는 다른 운영체제에서나 실현 가능하다는 말이다.

김일성의 이러한 뜻은 처음에는 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동춘은 경제 지도일군들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에서,<sup>60)</sup> 즉 사상에

---

59) 김일성, 위의 글, 35쪽.

60)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맡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서 그리고 리길송은 여전히 속도전<sup>61)</sup>에서 경제지도와 기업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 그러나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 이제 주요 논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어떻게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에서 더 잘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당 기관지인 『근로자』 1981년 6호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당위원회 집체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하에 편집국 논설을 첫 장에 실었다. 이후 자재공급사업과 협동생산조직에서의 대안의 사업체계의 관철 그리고 경제지도와 기업 관리를 개선하는 방도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강경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 공간을 잘 이용하는 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며 기업 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 질에 따라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정함으로써 공장·기업소들이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62)</sup> 김영상은 북한에서 군(郡)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규모가 대단하다며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집체적 지도체제인 군당위원회의가 군에서 당 사업과 경제 사업을 밀착시켜(군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시켜) 당 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 사업을 대행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행정일군들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적극 높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를 더욱 개선하여 나갈 수 있다”[리동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새 전망과업 수행의 중요방도,” 『근로자』, 제1호(1981), 56쪽].

- 61) “생활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세차게 벌려나갈 때 …… 제2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새 전망과업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 점령함으로써…”[리길송,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제2호(1981), 51쪽].
- 62) 강경순, “제품의 질제고와 가격공간의 리용,” 『근로자』, 제6호(1981), 47~50쪽.

했다.<sup>63)</sup>

송몽린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철저히 관철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 생산과 경영 활동을 최대한으로 짜고 들어야 한다며 기업 관리의 정규화·규범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정규화와 규범화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규범과 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꾼들이 그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관리를 정규화·규범화해야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연관된 부문들 사이의 협동생산을 강화하며 국가계획 규율을 강화하며 전반적 경제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기업 관리의 정규화와 규범화를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일시에 적용하기보다는 모범단위를 먼저 만들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해야 그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며, 이미 김일성과 당의 지도 밑에 지난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본보기 공장을 꾸리고 사업을 적극 벌인 결과 기업 관리를 정규화·규범화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했다.<sup>64)</sup> 송몽린이 말한 본보기 공장이란 바로 1973년 또는 1974년에 설립되어 시험 운영되고 있던 연합기업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흥걸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적용하면서 자재를 위에서 자재 상사를 통해 아래에 보장·공급해주는 자재공급체계가 형성되어 자재 공급에서 관료주의적 형태가 극복되고 있다면서, 자재 상사도 자재 공급에서 상업적 형태, 즉 등가계산의 원칙에서 진행되어 자재 공급에서 효

---

63) 김영상,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의 지도,” 『근로자』, 제7호(1981), 27~33쪽.

64) 송몽린,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 『근로자』, 제7호(1981), 34~38쪽.

울성이 높아지고 협동생산도 원만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5)</sup> 한편, 상이나 관리국장들이 자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아직 연합기업소가 시험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그의 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김관현은 설비 관리와 자재 관리, 노력 관리와 재정 관리 등에서 계획화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시켜야 절약 투쟁을 힘 있게 벌일 수 있다며 이것과 더불어 절약 투쟁의 전제 조건이 되는 독립채산제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계획화사업과 기준화사업을 잘해야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계획적 지도와 관리를 보장할 수 있다<sup>66)</sup>고 했는데 기준화사업은 생산재와 소비재 특히, 생산재에서의 표준화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합기업소의 전면적인 도입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봉주는 공장당위원회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10대 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공장당위원회는 이미 대안의 사업체계가 1962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장당위원회사업(설비 관리, 자재 관리, 노력 관리, 재정 관리 등)을 더욱 개선한다는 그의 주장은 공장당위원회사업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오늘 공장당위원회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공장·기업소 앞에 맡겨진 생산 과제를 수행하도록 옹기 이끌어주는 것이다”<sup>67)</sup>라고 지적하는데, 당시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

65) 박홍걸, “우리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 『근로자』, 제8호(1981), 45~49쪽.

66) 김관현,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근로자』, 제9호(1981), 44~48쪽.

67) 박봉주,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근로자』, 제10호(1981), 39~44쪽.

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설비 관리, 자재 관리, 노력 관리, 재정 관리 등과 같은 공장당위원회사업의 개선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절약해 생산을 정상화하려는 주장이다.

최원철은 기업 관리를 정규화·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리고 최원철에 따르면 재정 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과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는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는 방도라고 하면서, 재정총화제도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 총화와 재정 총화제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되어야 정치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평가를 옹계 결함시켜 생산자들이 맡은 혁명과업 수행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68)</sup> 물질적 평가를 개인 단위로까지 제도화시키지는 — 연합기업소는 부분적인 개선 조치가 아니라 개인 단위까지 물질적 작대로 평가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 조치가 전제되어야 원활히 운용될 수 있다는 — 주장이다.

변승우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 활동은 화폐관계를 매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소 경영 활동에 대한 은행의 통제는 국가가 실시하는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가운데서 가장 위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모든 자금 공급 과정에서 예외 없이 기업소의 자금 수요의 타당성을 엄격하고 엄밀한 기준에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일군들의 미숙함으로, 은행 사업을 정규화·규범화하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의 요구에

---

68) 최원철, “재정관리사업과 기업관리의 합리화,” 『근로자』, 제10호(1981), 56~59쪽.

맞게 은행 사업 규정들을 개선하고 은행일군들의 동작규범(사업 수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은행일군들은 지금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본보기단위를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해 좋은 사업 경험을 쌓으며 그를 일반화해 훌륭한 동작규범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sup>69)</sup> 당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등도 현실 변화에 맞게 개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근로자』 1981년 제12호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한 논문이 4편<sup>70)</sup>이나 실렸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시작된 지 20년을 기념해 특집호가 나온 것이다. 논문들의 내용 대부분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당위성 그리고 우월성에 대한 것이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김일성에 의해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71)</sup>

기존의 공업지도체계에서는 정무원과 부들에서 도에 있는 공장, 기업소를 직접 관리·관할했으나,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도 경제위원회가 도 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관할하며 생산과 기업 관리를 직접 현지에서 지도하며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서는 전망 계획을 연구하는 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도, 협동생산을 맞물려주는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당 지도부에서 새로

69) 변승우, “경제사업과 은행의 통제적 역할,” 『근로자』, 제11호(1981), 49~53쪽.

70) 편집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의 공산주의적 기업관리형태,” 『근로자』, 제12호(1981), 10~15쪽; 신수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대안체계의 근본요구,” 『근로자』, 제12호(1981), 16~20쪽; 양인혁,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근로자』, 제12호(1981), 21~25쪽; 유시영, “대안의 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근로자』, 제12호(1981), 26~30쪽.

71) 편집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의 공산주의적 기업관리형태,” 14쪽; 양인혁,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23쪽; 유시영, “대안의 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30쪽.



운 공업지도체계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가능해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체계를 관할·관리하는 데에서는 규모와 범위의 문제가 있었다. 정무원의 각 위원회와 부들에서 부문별로 전국에 걸쳐 있는 공장·기업소를 지도하기란 무척 어렵고 규모와 범위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두 번째, 양인혁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 모든 지방들에서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들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해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 있으며 국가에 더 많은 보탬을 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다.”<sup>72)</sup> 북한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투자에 필요한 축적의 문제를 항시적으로 안고 있다. 그러므로 도 단위에서 자력갱생적 경제구조, 즉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도 경제를 중앙의 도움 없이 도 스스로 운영하고, 나아가 국가가 필요한 축적에 도움을 준다면, 국가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축적의 또 다른 원천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소비재 생산, 소비 그리고 유통을 군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었고 이제 도 단위에서 생산재 생산, 소비와 유통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먼저, 도 단위에서 생산재까지 자급자족하는 것은 북한의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떠나 불가능

---

72) 양인혁,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24쪽.

한 일이다.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식량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산악지대로 도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 생산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재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소비재 생산에서도 지역의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생산재 생산까지 자급자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지역과 지역 간의 물물교환 또는 무역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 단위에서의 자급자족체계를 실행하는 것은 각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와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자 도와 가난한 도를 불가피하게 만들어낸다. 만약 중앙 차원에서 이런 양극화를 예산 지원 등과 같은 행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서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내놓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었으며 4년 후인 1986년 연합기업소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사실상 대체되는데, 도 단위에서 자력갱생적 경제구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새로운 공업지도체계 도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안고 있던 자원 부족과 투자에 필요한 축적 문제는 도 단위에서 자력갱생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고도 잘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과 당 지도부는 ‘80년대 속도’라는 또 다른 속도전을 발기하고 증산절약운동을 전개했다. ‘80년대 속도’는 전 인민적 차원에서 벌어졌는데 생산자 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궁한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운동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대중적 투쟁과 집단적 혁신으로 풀어나가는 전진운동이라고 한다.<sup>73)</sup> 그러나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3대혁명소조운동’, ‘70일속도전’, 또는 ‘3대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이 대중의 정치적·도덕적 동기,

즉 사상을 강화(자극)해 대중이 더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중동원식 증산절약운동이다.

수확체감은 일반 법칙이며 어느 것에도 적용된다. 사상과 물질적 동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물질적 동기 중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강조한다면 수확체감의 법칙의 적용을 받아 그 효과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80년 신년사에서 ‘10대 전망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제에서 가시적 성과에 집착했던 것 같다. 경제적 공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 것임을 강조하고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산업 전반에서 관철하려 하고 이것이 구현된 연합기업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강조·실시되었을 뿐, 현실을 지배했던 것은 사상을 강조하는 대중동원식 증산절약운동이었다.

속도전이 강조될수록 산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생산의 파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계획은 합리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북한의 당 간부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완곡하게나마 자신들의 논문에서 1983년 중반부터 1985년까지 『근로자』 거의 매 호마다 지적하며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이용 그리고 경제 관리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다시 주장하기 시작한다.<sup>74)</sup> 그들은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

73) 리정준, “‘80년대속도’ 창조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 『근로자』, 제3호(1983), 55~56쪽.

74) 리원경, “사회주의하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옳은 결합,” 『근로자』, 제8호(1983), 22~27쪽; 송주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 『근로자』, 제1호(1984), 46~49쪽; 윤기정, “경제관리의 합리화와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 『근로자』, 제4호(1984), 35~37쪽; 김태

이용과 경제 관리의 합리화가 더 이상 이론과 제한적·시범적 영역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들의 우려는 공론화되었고 김일성은 드디어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합기업소의 전면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경제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따라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는 반드시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경제법칙에 철저히 의거하지 않고 그 어떤 결정을 채택하거나 당적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 운영하는데서 객관적 경제법칙에 의거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편향을 범하게 되며 결국은 사회주의건설을 망쳐먹게 됩니다…(중략)…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사회주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특히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하여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 데 대하여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

극, “생산정상화와 자재공급사업,” 『근로자』, 제5호(1984), 42~45쪽; 변승우, “재정규률의 강화와 원에 의한 통제,” 『근로자』, 제5호(1984), 50~54쪽; 홍동익, “정확한 경제계산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근로자』, 제6호(1984), 51~55쪽; 최원철,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 『근로자』, 제7호(1984), 22~27쪽; 한인호, “기업관리에서 원가공간의 합리적 리용,” 『근로자』, 제7호(1984), 45~49쪽; 김찬숙,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와 그 올바른 이용,” 『근로자』, 제8호(1984), 36~39쪽; 김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의 옳은 결합,” 『근로자』, 제10호(1984), 45~49쪽; 최재국, “경제사업에서 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근로자』, 제11호(1984), 34~37쪽; 유시영,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과학적인 방법론,” 『근로자』, 제12호(1984), 39~45쪽; 차상로, “경제적 공간과 그 합리적 리용,” 『근로자』, 제12호(1984), 45~48쪽; 김원석, “경제건설에서 질적 지표의 개선문제,” 『근로자』, 제6호(1985), 39~45쪽; 한인호,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한 방침,” 『근로자』, 제2호(1985), 58~62쪽.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바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 내 생각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관리국과 연합기업소들을 조직하고 관리국과 연합기업소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하면 기업관리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략) …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서들과 정무원 책임일군들은 오늘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따라 관리국과 연합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안을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sup>75)</sup>

연합기업소의 전면적인 도입은 북한 경제 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이 연합기업소 구축으로 가는 연합기업소 체제를 의미하며 북한에서 이제 경제적 공간의 활용을 통한 경제 관리의 합리화가 제도화되는 북한 경제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 체제에서의 계획체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규모와 범위, 즉 공간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화체제가 현실에서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창발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에서 계획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경제적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해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하고 활용을 극대화해 증산을 하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요구된다는 논리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화는 규모와 범위의 문제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의 규모 또는 범위를 분할해(연합기업소 체제) 계획의 세부화를 도

---

75) 김일성,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4.11.13), 『김일성전집 8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329~335쪽.

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연합기업소가 계획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창발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즉 각 연합기업소에서 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위치시켜 그 집체적지도하에 연합기업소의 공업생산과 기업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하 공장·기업소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그러므로 연합기업소 체제가 잘 운영되어 북한이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연합기업소 체제에서 얼마나 잘 관철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원만한 운영은 결국 당 조직 사업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경제 사업은 정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상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 체제에서 각 공장·기업소와 생산자 대중의 창발성이 좀더 효과적으로 발양될 수 있는 근거는 연합기업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76)</sup> 연합기업소 산하 개별 기업도 독립채산제

---

76) 한인호에 따르면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 밑에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해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고 한다. 나아가 그는 독립채산제 규정과 세칙을 잘 만들고 과학적인 계산제도를 세우며 계획실행평가를 바로잡고 물질적 자극공간을 옹계 이용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인호,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기업소 창발성의 옹계 결합,” 『근로자』, 제5호(1986), 47쪽).

한인호의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합기업소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 물질적 자극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는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도덕적 자극공간을 자극하는 것은 증산절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한지도부는 물질적 자극공간을 활용하는 운영체제를 고안, 실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연합기업소는 2중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것은 이전 체제와 비교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먼저 행정적·관료적 명령관계에서 계약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연합기업소에서 자재 공급은 국가가 계획을 통해 개별 공장·기업소에 직접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기업소가 직접 자체의 자재 상사를 갖고 자기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른 연합기업소와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sup>77)</sup> 즉 계약 관계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연합기업소 체제는 2중 독립채산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 결과는 이제 그 기업 자신의 생산계획이 얼마만큼 수행되었는가에 의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연합기업소 전체의 계획 수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따라 다시 평가받게 된다. 즉 연합기업소가 생산계획을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해 이익을 올리면 산하 기업들도 거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으며, 반대로 연합기업소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하 기업들도 거기에 관련된 정도에 따라 보상을 책임지게 된다.<sup>78)</sup>

연합기업소 매개 단위까지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연합기업소는 경제 공간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며 경제 공간은 연합기업소에 소속된 모든 단위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연합기업소 내의 수·공급체계는 연합기업소 내 기업 간의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매개 연합기업소마다 내부 시장 (intra-industry market)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sup>79)</sup> 그뿐 아니라 연합기업

---

77) 김철식, “우리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2호(1985), 71쪽.

78) 김철식, 위의 글, 71~72쪽.

소 체제에서는 자재 수·공급에 있어 연합기업소가 직접 자체 자재 상사를 갖고 자기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재에 관해서는 다른 연합기업소, 기관, 심지어는 무역회사와 계약을 통해 확보하도록<sup>80)</sup> 했는데 이것은 자재의 수·공급 조절이 연합기업소 간의 시장<sup>81)</sup> (inter-industry market)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자재 수·공급에도 경제적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면서 이제 북한의 거의 모든<sup>82)</sup> 자재 수·공급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 『근로자』 마지막 호인 12호에서 유시영은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경제 관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경제 관리 모든 부문에서 관철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연합기업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시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틀어쥐어야 할 중요한 고리는 련합기업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이다. 그것은 경제규모가 커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

---

79) “...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게 된다”[리상설,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련합기업소, 『근로자』, 제7호(1986), 50쪽].

80) 김철식, “우리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75쪽.

81) 매개 연합기업소들이 직접 ‘중앙자재총련합상사’ 또는 ‘지구자재련합상사’를 통해 서로 계약을 맺고 원료, 자재를 해결하게 했는데 ‘중앙자재총련합상사’와 ‘지구자재련합상사’는 자재 수·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82) 군수물자와 전략적 물자는 여기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히 관찰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계획화사업과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sup>83)</sup>

유시영의 위의 글은 연합기업소 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경제 통제의 영역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를 더 이상 고집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사상·의식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천리마운동식 대중동원을 통해 증산을 촉구하는 것은 생산의 파동성을 높이고 낭비를 초래해 자원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경제 공간의 합리적 적용과 경제 관리의 합리화는 북한 지도부 사에서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왔으며 그 결과로 북한은 연합기업소 체제라는 새로운 경제 관리 운영체제를 1986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합기업소 체제는 제한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시장(market)을 생산자재 수·공급체계에서 주로(走路)로 활용하는 새로운 체제였다. 북한에는 지시적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생산품이 이미 소비재 생산에 큰 비중(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군 단위에서 지방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 유희 자재와 예비를 동원·활용해 생산된 소비재가 바로

---

83) 유시영,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제12호(1986), 63쪽.

그것이다. 이렇듯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6년까지 발간된 북한 문헌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경제는 중앙집권적인 엄격한 통제와 지시에 의한 계획경제라고 알려진 기존의 주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 4. 나가며

북한의 국가적 목표는 자립 노선을 고수하며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 완결적인 경제 기반을 이루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했다. 따라서 소련과 같은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이들과의 경제적 교류는 북한 경제 건설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요조건과도 같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소련과의 갈등으로 외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교류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이라는 천리마운동은 바로 위와 같은 북한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천리마운동은 공업 부문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경공업과 농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외부 지원과 외부와의 교류의 부재에서 자구책으로 시작된 자력갱생은 단지 중공업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방(처음은 도(都) 그리고 군(郡) 차원으로 세분화)에서의 자력갱생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방에서의 경제적 자력갱생은 지방에서 요구되는 소비를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천리마운동이 확대·심화될수록 지방의 경공업 그리고 원래부터 국가 소유가

아닌 집단 소유인 농업은 중앙집권적 계획 영역 밖에서 운영·발전되었다.

천리마운동과 같이 대중동원을 통한 증산운동은 대중의 창발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진행이 전개될수록 계획의 과행성을 증폭시켰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 그리고 이것을 작동시키는 체계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 전반에 도입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와 범위에 있었다.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일치단결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관리의 합리적 규모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더군다나 물질적 동기가 동반하지 않는 절약에 대한 강조는 공허한 것이었으며, 지속적인 천리마식 대중동원 방식의 증산운동은 절약보다는 낭비를 초래해 자원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한에서 독립채산제, 현물평가제, 그리고 도급제 등과 같은 경제적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와 이것들에 대한 실험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위기에 대한 일시 대처용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연합기업소는 북한이 안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리로서 10년 이상의 실험을 거쳐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것은 북한 경제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체제가 성립된 것을 의미했다.

■ 접수: 9월 4일 / 수정: 11월 18일 / 채택: 11월 27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전집 1~8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2009).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5).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_\_\_\_\_,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균형문제의 창조적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2) 논문

강경순, “제품의 질제고와 가격공간의 리용,” 『근로자』, 제6호, (1981).

권진상,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근로자』, 제10호(1968).

김관형,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근로자』, 제9호(1981).

김경련,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경제관리 개선의 중요담보,” 『근로자』, 제8호(1978).

김상학, “인민 경제 발전에서 도 경제위원회의 역할,” 『근로자』, 제7호(1960).

김상학·박영근, “현시기 공업 관리 체계 개편의 객관적 필연성과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 『근로자』, 제15호(1959).

김성택,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근로자』, 제1호(1975).

김영상,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의 지도,” 『근로자』, 제7호(1981).

김원석, “경제건설에서 질적 지표의 개선문제,” 『근로자』, 제6호(1985).

\_\_\_\_\_,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계획화사업,” 『근로자』, 제1호(198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1980.10.10), 『근로자』, 제11호(1980).

- 김재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근로자』, 제3호(1979).
- \_\_\_\_\_,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제12호(1979).
- 김중환·김정일,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근로자』, 제17호(1963).
- 김찬숙,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와 그 올바른 이용,” 『근로자』, 제8호(1984).
- 김 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의 옳은 결합,” 『근로자』, 제10호(1984).
- 김철식, “우리나라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2호(1985).
- \_\_\_\_\_, “경제발전이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 요구,” 『근로자』, 제3호(1977).
- 김태극, “생산정상화와 자재공급사업,” 『근로자』, 제5호(1984).
- 김태윤, “대한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하자,” 『근로자』, 제11호(1973).
- 로태석,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근로자』, 제7호(1978).
- 리근환,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11호(1976).
- 리길송,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제2호(1981).
- 리동춘,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새 전망과업 수행의 중요방도,” 『근로자』, 제1호(1981).
- 리민수, “기본 건설에서 당의 집중화 정책을 관철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자,” 『근로자』, 제3호(1966).
- 리상설,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연합기업소,” 『근로자』, 제7호(1986).
- \_\_\_\_\_,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의 올바른 리용,” 『근로자』, 제9호(1979).
- 리원경, “사회주의하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옳은 결합,” 『근

- 로자』, 제8호(1983)
- 리재영,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계획화사업,” 『근로자』, 제9호(1966).
- 리정준, “‘80년대속도’ 창조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 『근로자』, 제3호(1983).
- 박용성, “지방 공업의 확고한 토대 축성과 새로운 발전 단계,” 『근로자』, 제15호(1962).
- 박남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당의 주체적인 계획화 방침,” 『근로자』, 제9호(1980).
- 박봉주,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근로자』, 제10호(1981).
- 박홍걸, “우리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 『근로자』, 제8호(1981).
- 변승우, “재정규률의 강화와 원에 의한 통제,” 『근로자』, 제5호(1984).
- \_\_\_\_\_, “경제사업과 은행의 통제적 역할,” 『근로자』, 제11호(1981).
- 송몽린,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 『근로자』, 제7호(1981).
- 송주규,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행정경제조직사업과 당정치사업,” 『근로자』, 제1호(1984).
- 신수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대안체계의 근본요구,” 『근로자』, 제12호(1981).
- 심재성,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 운동,” 『근로자』, 제4호(1971).
- 양인혁,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근로자』, 제12호(1981).
- 유시영,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근로자』, 제12호, (1986).
- \_\_\_\_\_,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과학적인 방법론,” 『근로자』, 제12호(1984).
- \_\_\_\_\_, “대안의 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근로자』, 제12호(1981).
- 윤기정, “경제관리의 합리화와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 『근로자』, 제4호(1984).

전영설, “사회주의경제운영에서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 공간을 옹계 리용하자,” 『근로자』, 제3호(1973).

전창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자,” 『근로자』, 제6호(1968).

차상로, “경제적 공간과 그 합리적 리용,” 『근로자』, 제12호(1984).

최원철,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 『근로자』, 제7호(1984).

\_\_\_\_\_, “재정관리사업과 기업관리의 합리화,” 『근로자』, 제10호(1981).

최재국, “경제사업에서 타산을 잘하여야 한다,” 『근로자』, 제11호(1984).

최진성,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근로자』, 제12호(1974).

편광성, “경제예비동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8호(1968).

편집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의 공산주의적 기업관리형태,” 『근로자』, 제12호(1981).

\_\_\_\_\_,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제5호(1977).

\_\_\_\_\_,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근로자』, 제3호(1963).

\_\_\_\_\_, “당 규약은 당 조직들의 활동 준칙이며 당생활의 기본표준이다,” 『근로자』, 제10호(1961).

한인호,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기업소 창발성의 옹은 결합,” 『근로자』, 제5호(1986).

\_\_\_\_\_,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근로자』, 제2호(1985).

\_\_\_\_\_, “기업관리에서 원가공간의 합리적 리용,” 『근로자』, 제7호(1984).

한중순, “독립채산제와 기업관리의 합리화,” 『근로자』, 제5호(1979).

홍동익, “정확한 경제계산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근로자』, 제6호(1984).

### 3) 기타

『로동신문』, 1963년 1월 17일, 1964년 1월 18일.

## 2. 국내 자료

-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2』(서울: 국토통일원, 1988).  
고뢰정, 『북한경제입문』, 이남현 옮김(서울: 청년사, 1988).  
고승효, 『현대북한경제 입문』, 이태섭 옮김(서울: 대동, 1993).  
\_\_\_\_\_,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김한민 옮김(서울: 청사, 1988).

## 3. 국외 자료

- Fitzer, Donald,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London: Pluto Press, 1986).



##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Keunloja* and *Kyungjaeyeongoo*) - part I

Phillip H. Park(Kyungnam University)

Although North Korea does not publish qualitative data on its economy, it is not impossible to study and understand North Korean economy. It is because North Korea publish economy focused journals such as *Kuenloja*(Labor) and *Kyungjaeyeongoo*(Study on Economy) which contain articles discussing not only current situa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but also providing recommendations or sugges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economy and to re-interpret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carefully studying and analyzing articles from *Kuenloja* and *Kyungjaeyeongoo*.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nnecting articles. The first article(which appears in this current issue) covers the period between 1953 to 1986. In this period, North Korea had tried to developed self-reliant economy but the building self-reliant economy in

the small and resource poor country wa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ask. North Korea through a trail-error process finally came up with the *Yeonhapkiupso*(Industrial Combined Complex) system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watershed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since the *Yeonhapkiupso* system embodied rationalization of plan and allowed (though in the limited sense) market mechanism to play in the North Korean economy.

Keywords: *Kuenloja*(Labor), Chollima-Movement, Daeam System,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rationalization of socialist economy, *Yeonhapkiupso* (Industrial Combined Complex) system